2017년도 예산안

위원회별 분석

2016. 10. 21.

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

상 지 원

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

예산분석총괄과

❑ 담당 위원회

- 국토교통위원회
  - 국토교통부
  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  - 새만금개발청
- 정무위원회
  -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
  - 국민권익위원회
  - 국가보훈처
  - 공정거래위원회
  - 금융위원회
- 기획재정위원회
  - 기획재정부
  - 국세청
  - 관세청
  - 조달청
  - 통계청

Ⅰ. 국토교통부

1.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문제점(국토도시실)

❑ 현황

-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목적
- 2017년도 예산안으로 3,739억원 편성되었으며, 전년 대비 1,154억원(23%) 감소
- 2017년에는 총 64개 진입도로 건설사업 지원(준공예정 21개, 계속사업 31개, 신규사업 12개)

❑ 문제점

- **3개 사업에서 「예산안 편성지침」의 '시설비 연차별 배부기준'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**
  - 초과편성규모 : 내포신도시첨단(35억원), 세종명학(20억원), 충주메가폴리스(1억원)
- **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된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**
  - 「산업단지 운영지침」에서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와 진입도로의 준공시기 일치 요구
  - 산업단지와 진입도로의 준공시기가 2020년으로 동일, 공사진행률·분양률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
- **세종명학산업단지는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된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**
  -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진입도로를 조속히 준공할 필요가 있으나, 9월말 집행률은 2%에 불과

Ⅰ. 국토교통부

2. 분양보증 적정 보증료율 검토 필요(주택토지실)

❑ 현황

- '분양보증'은 건설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직접이행·비용환급을 책임지는 보증
- 2015년 분양보증 실적은 89조 5,173억원, 보증료 수입은 4,466억원
- 분양보증 보증료율은 예상분양률, 보증등급,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

❑ 문제점

- **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분양보증에서 예상분양률을 낮게 책정하여 보증료를 과다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실제분양률·금융자산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분양료율을 결정할 필요**
  - 2015.1.1.~2016.8.23.기간 동안 이루어진 977건의 분양보증 중, 702건(71.9%)에서 예상분양률을 실제분양률보다 낮게 책정
  - 예상분양률을 낮게 책정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여 보증료율이 상승
    - ❖ 감사원은 2016.7.HUG 기관운영감사에서 HUG가 '주택구입자금보증'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높게 추정하여 보증료율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

Ⅰ. 국토교통부

3.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는 서울-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방식 개선 필요(도로국)

❑ 현황

- 서울-세종 고속도로는 경부·중부 고속도로의 상습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
- 사업기간 단축과 재정절감을 이유로 우선 서울-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설계비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공사를 우선 착공하고 추후에 민자전환 예정(2017년 건설보상비 1,000억원 반영)

❑ 분석의견

- **도로공사 우선 착공후 민자로 전환하는 방식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킬 우려**
  - 민자전환 전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, 국회의 건설보상비 심의전까지는 국회의 재정적 관여도 받지 않음
- **민자전환 전까지 도로공사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므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**
  - 도로공사 부담이 4.2조원 정도인데 부채규모가 26.8조(2016.6.기준)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
- **국회의 재정통제 강화 차원에서 사업방식 개선 필요**
  - 서울-안성 구간 사업수행방식은 선례가 없음

Ⅰ. 국토교통부

4. 과다계상된 무보험·뺑소니 보상금액 감액 필요(교통물류실)

❑ 현황

-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·뺑소니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우선 보상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임
- 2017년에는 무보험·뺑소니 보상으로 349억 4,200만원을 편성

❑ 분석의견

- **보상금 산정 시 보상금 감소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3개년 평균**(225억원)**을 이용**
  - 최근 블랙박스·CCTV 증가로 뺑소니 검거율 크게 증가하여 보상금액이 크게 감소
    - ❖ (2013)270억 → (2014)232억 → (2015)172억→ (2016.6.)77억
- **2016년 4월부터 50% 상향된 책임보험한도를 보상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**
  - 등급별 최대보상한도가 50% 인상된 것으로 보상금이 비례적으로 50%증가하는 것이 아님
  - 실제 2016년 4월 보상한도액 증가후에도 보상금 지급액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음
- **큰 폭의 보상금 감소추이와 실제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 필요**

Ⅱ. 기획재정부

1.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교육 업무위탁의 문제점(재정기획국)

❑ 현황

- 재정교육 및 평가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원 증액된 24억원
- 2016년 4분기부터 한국재정정보원에 재정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
-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2016년 7월 개원

❑ 문제점

- dBrain 위탁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재정정보원의 교육업무 위탁수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

- 재정교육 업무는 한국재정정보원법 상 정보원의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

- 설립연혁이 3개월에 불과하므로 본연의 업무인 dBrain 위탁운영에 우선 충실할 필요

- 설립 단계에서 과도하게 주변 업무를 위탁하여 기관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
- 재정정보연구본부 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나 현재 인원 충원단계에 있음

Ⅱ. 기획재정부

2. 외평채 신규발행 필요성 검토 필요(외국환평형기금)

❑ 현황

- 기획재정부는 2017년 10억 달러의 외평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(1조 1,500억원)
- 2017년 발행계획은 상환예정 외평채 차환목적이 아닌 순수한 신규발행임

❑ 문제점

- **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기대효과**
  -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한 위기대응 여력 확보, 벤치마크 설정을 통한 외화조달 비용 절감, 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
- **외평채 신규발행 시 고려사항**
  - 외환보유액 확충이 목적이라면 해외 M&A 외화대출(50억불) 사업부터 정리 필요
  - 단기외채비율이 낮고 국가신인도가 높아 신규 발행한 2009년 금융위기 때와는 여건이 다름
  -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대 수준이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향후 증가 예상

Ⅱ. 기획재정부

3. 법정배분사업 운영 개선과제(복권기금)

❑ 현황

- 법정배분사업은 과거 복권발급 수입을 얻었던 기관들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2004년 도입

- 2017년도 법정배분사업 계획액은 전년 대비 413억원 증액된 5,780억원

❑ 문제점

- 국가가 영구적 보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 조정방안 모색 필요

• 복권발행 업무의 복권위원회로의 일원화는 과열경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공익적 결정

- 법정배분지출용도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기금의 기본방향과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

• 단기간 내 제도 폐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지출용도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

- 재정여력이 과다한 기관에 대한 지원규모 조정 필요

• 여유자금이 과다한 기금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기관에 대한 과다지원 사례 방지 필요

Ⅲ. 금융위원회

1.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(신용보증기금)

❑ 현황

-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부터 차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안정 유동화보증 도입
- 2017년 시장안정특별보증 대위변제 계획액은 전년 대비 3,317억원 증액된 5,204억원

❑ 문제점

- **대규모 기업부실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문제 발생**
  - 현대상선, 동부제철, 한진해운 등 3개 기업 회사채 부실 총액은 1조 834억원
    - 이 중 최대 90%에 대한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고, 한진해운은 사후 상환 불가능할 수 있음
- **차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논의할 필요**
  -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매번 만장일치로 차환발행 승인
  - 차환발행 시마다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지원 여부의 적정성 재판단 기회가 있었음
  -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

Ⅲ. 금융위원회

2. 적정 운용배수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(보증기금 공통)

❑ 현황

- 운용배수는 보증성 기금의 보증잔액을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
-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성 기금의 적정 운용배수는 10~12.5배 수준

❑ 문제점

- **모든 보증성 기금은 은행의 BIS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를 일괄 설정**
  - BIS 자기자본 비율은 가계와 기업,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모든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설정
- **보증의 대상과 성격, 대위변제율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운용배수 설정 필요**
  -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보증의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나 BIS 비율 역수인 10~12.5배를 적정운용배수로 일괄 설정
  - 각 보증기금들은 대위변제율과 무관하게 적정 운용배수를 변함없이 유지
    -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은 2008년 이후 1.1%를 초과한 경험이 없음
  - 적정 운용배수 상향 시 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부담 경감, 보증공급 규모 추가 확대 가능

Ⅲ. 금융위원회

3. 농특회계 추가 전출 가능성 검토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

❑ 현황

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농특회계로 2017년 1,000억원 전출 계획(2016년 3,000억원)
- 기금의 운용배수는 2017년 5.4배로 전망(적정 운용배수 12.5배)

❑ 문제점

- **기금의 낮은 운용배수 및 농특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출규모 확대 검토 필요**
  - 기금의 중장기 운용배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운용배수가 7.0배로 여전히 낮은 수준
  - 농특회계는 매년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음(-)의 세계잉여금 발생
    - 2012년 -2.6조원, 2013년 -1.8조원, 2014년 -2.1조원, 2015년 -1.5조원
  - 농업지원이라는 공통목적을 지닌 기금 여유재원 이전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가능

2017년도 예산안

위원회별 분석

2016. 10. 21.

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

서 세 욱

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

산업예산분석과

❑ 담당 위원회

-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
  - 미래창조과학부
  - 방송통신위원회
  - 원자력안전위원회
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  - 농림축산식품부
  - 해양수산부
  - 농촌진흥청
  - 산림청

- 산업통상자원위원회
  - 산업통상자원부
  - 중소기업청
  - 특허청

Ⅰ. 주요 현안 분석

❑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 (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)
-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선정한 중장기 투자과제 (인공지능, 자율자동차, 초미세먼지, 가상증강, 스마트시티, 탄소자원화, 바이오신약, 경량소재, 정밀의료)
- 총사업비 약 1조 6,000억원, 최장 2026년까지 수행되는 중장기 대형 R&D 사업
- 7개 부처의 9개 프로젝트로 구성, 2017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300억원 편성
- 준비 기간 부족, 5개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, 「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」과의 역할 분담 불명확 등의 문제 발생

❑ 주요 증액 R&D사업의 평가 연계 미흡(미래창조과학부 등 16개 부처)
- 전년대비 10% 이상 증액된 사업 81개 사업의 2017년 예산안은 3조 8,955억원, 전년 대비 평균 증가율 24.8%
- 81개 사업 중 각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9개에 불과, 보통 평가 사업은 32개
- 「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각종 평가에서 보통 평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불가

Ⅰ. 주요 현안 분석(계속)

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(농림축산식품부)

-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수확기 산지 쌀값은 143,789원인 반면, 2016년 10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1,808원에 불과하여 대규모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정 예산 반영 필요

산지쌀값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

(단위: 백만원)

수확기 산지 쌀값	변동직불금(추계)	변동직불금부족분(추계)
143,789원	977,747	0
138,000원	1,199,413	221,666
136,000원	1,275,989	298,242
134,000원	1,352,566	374,8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을 인하할 필요 (산업통상자원부)

- 기금의 지출(2017년 1조 6,184)이 법정부담금 수입(전기요금 3.7%, 2017년 2조 3,038억원)에 미치지 못해, 여유자금의 지속적 증가(2017년 말 기준 4조 3,304억원)
-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여유자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
- 그러나 ① 에너지 분야 재정지출이 감소(2008년 6.5조→2017년 3.4조)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대규모 재정 지출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, ②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이행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금의 부담은 축소될 필요가 있으며, ③ 전기사업법에서 부담금이 점차 축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취지를 존중할 필요

Ⅱ. 성과부진

❑ 기술확산지원 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
- SaaS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6년간 개발비용 80억9,500만원 지원
- 2016년9월말 기준 매출액은 42억2,000만원, 특허등록 건수 19건에 불과
- SaaS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 발생 및 특허등록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

❑ 평가 결과와 연계한 R&D 예산 조정 필요 (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부처 공통)
- 전년대비 10% 이상 증액된 16개 부처청의 81개 R&D 사업 중 각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 사업 9개, 보통 평가 사업은 32개, 미평가 사업 31개

❑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(산업통상자원부)
- 2016년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손실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으로 폐지되었으나 감면비율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전제로 2017년 재개

Ⅲ. 유사중복

❑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(해양수산부)
- 해양쓰레기 피해복구(지자체 보조), 해양폐기물정화(80억4,800만원, 민간단체 위탁), 연안어장 환경개선(72억원, 민간단체 위탁), 재해대책(지자체 보조)은 해양 침전쓰레기 수거처리라는 측면에서 유사
-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해양폐기물정화 사업과 차별화 필요

❑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(산업통상자원부, 중소기업청)
- 종전 전시회별 참가기업의 수를 설정하고 기업의 신청을 받던 방식에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전시회별 참가기업의 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, 60억원 편성
- 장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하고, 양 기관의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을 통합해나갈 필요

Ⅳ. 집행저조

❑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
- 2016년 민간 연구비 확보액이 계획대비 65.1% 수준에 불과하므로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 (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5.0% 증액 편성)

❑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등 위성개발 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
- 위성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비 이월 집행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

❑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(농림축산식품부)
- 실집행률이 2015년 38.7%, 2016년 44.0%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 되어 융자금 규모 조정 필요

❑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 (해양수산부)
- 대민협의 미흡,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

❑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(중소기업청)
-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

❑ 창의자본 기반구축 (특허청)
- 2016년 지식재산관리회사((주)ID)에 대한 정부출연금(30억원) 전액 미집행되어 이월될 예정이므로, 추가로 2017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미흡

V. 결산 시정요구 연계

❑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(미래창조과학부)
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직원사택의 규모가 과다하므로 직원사택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여 기관운영비로 충당하는 방안 검토 필요

❑ 국제농업협력(ODA) (농림축산식품부)
-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총사업비의 53%를 1차년도에 편성

❑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(해양수산부)
-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2015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

❑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 사업 (해양수산부)
- 2015 결산 심사시 바다마트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점포를 내실화하라는 시정요구

❑ 거점기관지원 사업 (산업통상자원부)
- 센터 건설과 장비구축이 미진한 거점기관지원 사업들의 실적 개선을 2015년 결산 심사시 요구

❑ 기술료(기타경상이전수입) (산업통상자원부)
- 일반회계.특별회계.기금에서 발생한 기술료에 대한 처리방식을 통일하라는 시정요구

Ⅵ. 사업계획 미흡

❑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 (방송통신위원회)
-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하기 위하여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기술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조사기술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

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(원자력안전위원회)
- 원자력시설 사이버사건 대응 및 조사기법 개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희망하는 참여기관이 불참을 결정한 상태이므로 연구장비 구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

❑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시범사업 (농림축산식품부)
- 대상작물과 재배 기술을 정확히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

❑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(R&D) 사업 (해양수산부)
- 개발된 표준선형의 어업현장 실용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 필요

❑ 수출지원기반활용 (산업통상자원부)
- 수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준비가 미흡한 상황

Ⅵ. 사업계획 미흡

❑ 창업성공패키지 (중소기업청)
- 사업 내용이 큰 폭으로 변경되고, 사업 참여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

❑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(산업통상자원부)
- 전력기금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 미비

❑ 지역에너지 절약 (산업통상자원부)
- 지역에너지신산업육성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펀드 사업일 경우 예산안 편성전에 사업자 공모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지침 미준수

❑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(ODA) (산업통상자원부)
- 에티오피아·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미완료

❑ 조선산업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(산업통상자원부)
-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고려하여 「석유화학 플랜트 교육」 조정 필요

❑ 권역별 신사업 육성 사업 (산업통상자원부)
-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부적절

Ⅶ. 과다편성

❑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
- 2017년 12월로 예정된 시험발사체 발사가 10개월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정 조정 필요

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
- 통신중계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미래부의 지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용 분담 확대를 검토할 필요

❑ 지급이자와 반환금 (미래창조과학부)
-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재원인 지급이자의 예산안 산출시 적용한 조달금리(2.64%)는 2015년의 연평균 조달금리(1.98%), 2016년 6월말 기준 조달금리(1.80%)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

❑ 재해대책비 (농림축산식품부)
-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은 25.9%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

❑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(해양수산부)
-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내년 하반기에나 사업의 착수가 가능

❑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(산업통상자원부)
-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산정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에 대한 감액 필요

Ⅷ. 기 타

❑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
-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4,805억원(38.9%)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일정 및 사업비 조정(안)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필요

❑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(방송통신위원회)
- EBS 2TV의 2017년 본방송 개시를 위해 필요한 「방송법」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EBS 2TV 프로그램 내역사업의 예산안은 「방송법」의 개정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

❑ 방재환경기반구축 (원자력안전위원회)
-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원자력발전소보다 낮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유사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원자력발전소보다 높은 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보강할 필요

❑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(해양수산부)
- 실제 지원 가구수가 2015년 2가구, 2016년 12가구에 불과하므로, 지원조건 등의 탄력적 운용 필요

❑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(R&D) (중소기업청)
- 신규 도입되는 후불형 R&D지원 사업으로, 도전적인 과제를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

❑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개발 (산업통상자원부)
- 예비타당성조사시 경제성 분석의 전제가 된 초고압직류송전 구축 계획이 한전의 송변전 설비계획보다 과다 예측되었으므로 경제성을 재평가할 필요

2017년도 예산안

위원회별 분석

2016. 10. 21.

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

문 종 열

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

사회예산분석과

❑ 담당 위원회

- **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**
  - 교육부
  - 문화체육관광부
  - 문화재청

- **환경노동위원회**
  - 환경부
  - 고용노동부
  - 기상청

- **보건복지위원회**
  - 보건복지부
  - 식품의약품안전처

- **여성가족위원회**
  - 여성가족부

Ⅰ. 교육부

1. 교원 해외진출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(국립국제교육원)

❑ 현황

- 교육부는 「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(ODA)」 사업의 내역사업인 "교원 해외진출"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 교원을 개발도상국 현지 정규학교 등에 파견
-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7,500만원 증액된 74억 7,500만원

❑ 분석 의견

- **비ODA 파견 규모 축소 또는 폐지 필요**
  - 동 사업이 ODA사업임을 고려하면 비ODA 국가에 30명의 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과다
- **단기봉사프로그램의 규모 축소 필요**
  - 단기봉사 프로그램의 규모(200명)가 장기교원 파견(140명)에 비해 과다
- **비ODA유형 파견에 따른 파견교사 급여, 퇴직교직원 자문관 급여의 감액 필요**
- **현직교원의 파견 비율 제고를 위하여 일선학교에 홍보하는 등 사업관리 필요**

I. 교육부

2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 대학의 조속한 계획 마련 필요 (대학지원관)

❑ 현황

- 교육부는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」사업,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」사업에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 대학 유형을 신설
- 2017년에는 4년제 대학 20개교, 전문대학 44개교를 선정하여 978억 2,700만원 지원 예정

❑ 분석 의견

- **대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규 대학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**
- **실질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과정당 지원액을 조정할 필요**
- **주문식 교육과정의 약정기업 취업률이 낮으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**
- **공학계열 위주의 학과 설치로 인문사회계 등 취업률 제고가 필요한 학과 소외 가능성**

Ⅱ. 문화체육관광부

1.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미래부 사업과의 차별화 및 해외지원센터 구축 필요성 재검토 (콘텐츠정책관)

❑ 현황

- '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'사업은 차세대 유망산업인 가상현실(VR)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임
  - 2017년도 예산안은 191억 5,000만원임

❑ 문제점

- **3DTV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킬러콘텐츠 개발, 디바이스 개선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**
  - 킬러콘텐츠 부족, 디바이스 이용의 불편함 및 어지럼증, 고가의 기기 등 3DTV 실패 원인을 내재
- **미래부도 '가상현실산업 육성'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 필요**
  - 양 부처가 모두 VR에 대한 기술개발(R&D), 콘텐츠제작, 유통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
- **해외유통센터 구축은 VR시장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초기투자로 볼 수 있음**
  - VR 콘텐츠 제작지원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유통 대상 콘텐츠를 찾기 어려울 것임
  - 짧은 시간 내에 VR 체험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콘텐츠 홍보보다는 VR 기기 홍보수단에 그칠 가능성

Ⅱ. 문화체육관광부

2. 휴관없는 박물관·미술관사업의 과다편성된 예산 조정 필요 (문화기반정책관)

❑ 현황

- 휴관없는 박물관·미술관 운영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등 9개의 국립 박물관·미술관을 휴관없이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·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
  - 2017년도 예산안은 72억 3,800만원임
  - 2016년 추경 시 신규로 편성되어 2016년 10월부터 3개소가 휴관없이 운영 중임

❑ 문제점

- **2016년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한 예산은 2016년 인력수요 대비 과다 편성됨**
  - 국립중앙박물관(서울) 1명, 국립민속박물관 5명, 국립현대미술관(서울관) 16명 과다 편성

- **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휴관없는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전액 감액**
  - 덕수궁의 개방과 연계되어야 하지만, 문화재청은 덕수궁 미휴관은 할 수 없다는 입장

- **2017년부터 신규로 휴관 없이 운영할 계획인 5개소에 대한 적정수준 예산 반영 필요**
  - 박물관의 개별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나, 월 개관일수에 4일이 추가됨에 따라 10명 이상의 추가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인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

Ⅲ. 보건복지부

1.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적정 표준보육비용 조사 필요(보육정책관)

❑ 현황
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
- 2017년 예산안은 3조 1,292억원으로 2016년 추경 대비 468억원 감액
- 80%를 종일반, 20%를 맞춤반으로 가정하여 편성
- 보육료지원단가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

❑ 분석의견

-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 추세, 어린이집 시설유형·규모, 정원 대비 현원 비율, 실제 제공되는 보육시간,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육비용 조사 필요
- 2017년 예산안은 종일반 비율을 80%로 예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8월 현재 실제 종일반 비율은 77.3%로서 향후 종일반 비율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

Ⅲ. 보건복지부

2. 시간제일자리 신설을 위한 일반형일자리 축소 부적정(장애인정책국)

❑ 현황

- 「장애인일자리지원」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를 확대하고,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
- 2017년 예산은 675억 5,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,900만원 감액
- 일반형일자리 사업 축소로 116억 5,500만원 감액, 신규 시간제일자리 사업 69억원 반영

❑ 분석의견

- 일반형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형일자리를 유지하고, 필요한 경우 시간제일자리를 추가로 신설 필요
  - 일반형일자리의 참여실적은 2016년 6월 배정인원 4,746명 중 4,741명이 참여 중에 있어 일반형일자리의 수요는 부족하지 않음

Ⅲ. 보건복지부

3. 전공과목별 수급 불균형 문제 개선 필요 (보건의료정책관)

❑ 현황

-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수가 신규 의사면허 수보다 많기 때문에 기피과목이 발생한다고 판단, 전공의 정원 수와 신규 의사면허 수를 일치시키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
  -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 감축 예정 (2012년 3,982명 → 2018년 3,186명)
- 기피과목 전공의의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단기연수 지원 사업을 실시

❑ 분석의견

- **주로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정원이 축소되고 있음**
  - 2012년 기준 2016년 전공의 정원은 16% 감소하였는데, 20% 이상 정원이 감축된 과목은 8개 과목으로 정형외과, 성형외과를 제외한 6개 과목은 모두 기피과목임
  - 필수의료과목인 외과, 산부인과도 2012년 정원 대비 73.3%, 86.5%로 축소하여,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의사 확보가 더욱 힘들 우려가 있음
- **전공의 단기연수지원 사업의 실효성 미흡**
  -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11개 기피과목 중 6개 학과가 충원률이 70% 미만임

Ⅳ. 환경부

1.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실적을 감안한 예산규모 조정(기후대기국)

❑ 현황

-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을 위하여 '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'을 추진하고 있는데, 2017년 예산안은 2016년 추경예산 대비 513억원이 증가한 2,643억원으로 편성
-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20년까지 유예함에 따라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예산 확대

❑ 문제점

- **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과 수요처 제한적**
  - 차종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차량가격이 1,990~2,952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1,400만원 정액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추가지원이 없으면 가격 경쟁력 취약
  - 일회 충전 후 이동거리가 91~191km이고 충전시간도 완속충전기 4~6시간, 고속충전기 30분 정도로 이동거리가 한정되어 수요처 제한적
- **국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파업과 수출 증가로 국내 보급량 확보에 어려움 가중**
- **2016년 목표량 대비 실제 보급실적 저조**
  - 2016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목표는 각각 8,000대와 8,050대인데, 실제 보급량은 2,401대와 2,526대로 저조

V. 고용노동부

1.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축소 필요(청년여성고용정책관)

❑ 현황

-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으로 2년간 1,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
- 2017년 지원대상은 총 6만명, 예산안은 1,441억원

❑ 문제점

- **시범사업 참여자 1만명에 대해 중도탈락률(20%) 반영 필요**
- **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수료자와 일학습병행지원 학습근로자의 고용유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적절히 산정할 필요**
  -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2017년도 신규 청년참여자(16만명) 중 3.8만명 정도가 2년간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수료자 1.7만명을 지원할 경우 취업지원금이 없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었을 사람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

V. 고용노동부

2. 고용촉진지원 대상자를 현행보다 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(노동시장정책관)

❑ 현황

-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,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「고용촉진지원」사업을 추진
- 2017년도 예산안은 1,790억원

❑ 문제점

- **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수 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만 지원대상 한정 필요**
  -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이 없었더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하였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어 정책효과가 미흡할 우려
  -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수 후 취업한 사람 중 42.4%가 1년 고용유지자이고 취업한 사람의 34.3%의 임금 수준이 150만원 이상이므로 고용촉진지원금이 없었더라도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서 고용유지가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음

Ⅵ. 기상청

1. 지진관측장비 시추공 공사비 조정 및 사업추진체계 필요(지진화산관리관)

❑ 현황

-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구입 및 설치, 국가지진종합시스템과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하여 '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'을 추진하고 있는데, 2017년 예산안은 94억원으로 편성

❑ 문제점

- 시추공 공사비의 과다편성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안의 조정 필요

- 실제 시추공 공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2015년 4억 7,700만원의 낙찰차액 그리고 2016년 1억 8,000만원의 낙찰차액과 5억 8,6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

- 지진관측장비 검증체계 미정비

- 지진관측장비 검정기관 지정 및 제작업체(수입업체)의 검정의무에 대한 규정 정비 필요

- 대국민 지진발생 문자발송시간 단축을 위한 통보체계 개선 필요

- 지진발생을 직접 관측하는 기상청이 직접 지진문자를 발송하는 것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 필요

Ⅶ. 여성가족부

1. 새일센터 운영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(여성정책국)

❑ 현황

- 「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」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상담, 직업훈련교육, 인턴십, 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
- 2017년 예산안은 479억원

❑ 문제점

- **고용복지서비스는 한 공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17년 신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+센터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필요**
  - 일부 고용복지+센터는 구직자를 다른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로 연계해 주면서 서비스가 충실히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: 고용복지+센터에 새일센터 직원이 한시적으로 파견 나와 있는 형태로 주 2회 서비스 제공 등
- **성과운영비 지원이 새일센터의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체계 검토 필요**
  - 새일센터 평가지표에 취업처 임금수준, 상용직 여부, 직업훈련 내용(업종 등)이 포함되지 않아 성과운영비 지원이 센터의 취업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는 미흡
  - 새일센터 시 · 도 성과급 차이가 크지 않고 센터별 지급 기준이 시 · 도별로 다름

2017년도 예산안

위원회별 분석

2016. 10. 21.

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장

박 혜 진

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

❑ 담당 위원회

- 국회운영위원회

- 국회
-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
- 대통령경호실
- 국가인권위원회

- 법제사법위원회

- 법무부
- 법제처
- 감사원
- 헌법재판소
- 대법원

- 외교통일위원회

- 외교부
- 통일부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- 국방위원회

- 국방부
- 방위사업청
- 병무청

- 안전행정위원회

- 행정자치부
- 인사혁신처
- 경찰청
- 국민안전처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1. 전자정부 사업 (행정자치부)

❑ 공공부문의 웹사이트 총 12,988개(2014년말 기준)

- 기관당 평균 17개
- 모바일앱 총 1,222개

❑ 2017년 예산안 1,263억 2,400만원

2. 정부3.0 (행정자치부)

❑ **2017년 예산안 1,109억 3,700만원**

- 2013. 6. 정부3.0 비전선포식
- 2014. 9. 정부3.0 발전계획 수립
  정부3.0 추진위원회 출범
- 2015. 7. 정부3.0 가속화 계획

❑ **정부3.0??**

- 2015. 12. 여론조사 결과 52.8% 전혀 모른다
- 성과공유 및 국민체감도 제고 36억원 편성

3. 형사보상금 (법무부)

❑ **2017년 예산안 275억원**

- 2011~2015년 평균 집행액 550억원
- 2016년 8월 기준 예산액 250억원 소진, 95억원 예비비 신청

4.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 (외교부)

❑ **831억원 규모의 신규기금 편성**

- 정부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

❑ **질병퇴치사업 355억원**

- 일반회계 ODA사업과의 조정 필요

5. 북한인권법 (통일부)

❑ 북한인권법 2016. 9. 4 시행

❑ 「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」 사업 신설. 152억 2,700만원 편성

-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
- 북한인권재단 운영

6. 국방개혁 기본계획 (국방부)

❑ **인력구조**

- 2020년까지 50만명 → 2022년까지 52.2만명

❑ **지상작전사령부 창설(1.3군 사령부 해체)**

- 2010년 → 2018년 말

❑ **육군부대개편**

- 군단 6개, 사단 24개 → 군단 6개, 사단 31개

7. 세탁기, 에어컨, 도시락 (국방부)

❑ 군인복지기금으로 정수 초과한 육군 간부숙소의 세탁기, 건조기 보급

❑ 전기료부족으로 에어컨 사용 어려울 수도

- 2015. 전기료 집행액 293,377백만원
- 2016. 8월 말 전기료 집행액 213,132백만원
- 2017. 전기료 예산안 248,865백만원

❑ 군인복지기금의 예비군 도시락 판매 · 관리 수수료 수납

- 국군복지단에서 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· 관리
- 도시락 판매액의 일정요율(2.5%) 수수료 수납

8.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규사업 (방위사업청)

❑ **방위력개선사업 절차**

- 선행연구 /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/ 사업타당성 조사 / 연구개발

❑ **신규사업 16개**

- 사전절차 중 4개
- 연구개발 중 3개

9. 도로통행속도 과태료 관련 제도(경찰청)

❑ **통행제한속도 결정절차**

- 경찰청, 지방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
- 통행허용속도 내 상 · 하한 비율의 범위
-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필요

❑ **무인단속장비 설치지점 평가**

10. 재난안전예산사업 관리 (국민안전처)

❑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0조2 및 제10조3

-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
- 재난안전사업 평가

❑ 관련예산의 기본경비 편성 내지 미편성